

## 회의진행순서

- 일 시 : 2021. 12. 16. (목) 14시
- 장 소 : 온라인 영상회의
- 심의 안건

〈안건1〉 감사기록의 공개범위

〈안건2〉 영상기록의 공개범위

## <안건1>

# 감사 기록의 공개범위

### I

## 기록개요

- ☐ 개 요 :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
- ☐ 생산시기 : 1970년 ~ 1988년 (30년경과)
- ☐ 생산부서 : 감사담당관
- ☐ 분 량 : 352권(4,013건)
- ☐ 현 공개입력값 : 비공개(1호,5호,6호)

### 2

## 기록물 내용

- ☐ 주요 기록물철
  - 감사계획철, 불시직무검열, 시장지시사항점검, 확인서철, 위생업소점검, 자체감사처분요구집행, 기강점검관계, 진정처리, 민원조사, 정보사항조사, 첩보사항처리, 서정쇄신관계, 비위공무원처분대장, 보건소종합검사, 주택건축분야보고서, 사업소종합감사, 특명감사, 사정기관통보문, 감사원대행검사직출사항, 청렴도측정결과, 구종합감사 외
- ☐ 주요 기록유형 및 포함정보

기록유형	내용 및 포함정보
감사계획서	감사대상기관, 일정, 감사사항, 감사반원 등
감사요구 민원문서 (진정서, 탄원서, 청원 서 등)	민원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민원내용
사정기관 통보 관련 문서	경찰청 등 사정기관에서 공무원 범죄사실 등을 통보한 문서 또는 그 내용을 정리 보고한 문서 등

	공무원범죄사실결과통보	인적사항(성명, 소속, 직위, 직급) 사건번호, 죄명, 처분일자, 처분결과
	공무원범죄사실통보	인적사항(성명,본적,주소,생년월일,소속,직급) 상세 범죄사실
	공무원사고발생보고	피의자/피해자 인적사항, 사고일시장소, 사 고내용과 경위, 관계기관 조치사항, 향후 조 치사항
	공무원연행보고	수사기관, 연행일자, 인적사항, 비위내용, 관 련자 인적사항
감사,조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서	진술서 (공무원/제3자)	인적사항(본적,주소,소속,직위,처벌사실유무, 학력, 가족및생활정도, 전적) 문답내용 조사자 직급,성명
	관련자조서 (관리기간조서)	성명, 직위, 직급, 소속부서(행위시,현재), 관 리기간
	경위서	소속,직급,성명,주소,진술내용
	확인서	소속,직급,성명,비위내용,관련자
	시말서	소속,직급,성명,내용
감사결과 발생하는 문서	감사결과보고서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감사개요, 조사결과, 주요지적사항, 조치의견 외
	관계공무원조서	성명, 현부서, 행위시부서, 조치요구사항, 비위사항
	경고장	소속,직급,성명,내용
	징계의결요구서	성명,생년월일,소속,직급,근무기간,본적,주소,징계 요구의견
대장류	감사결과처리부, 비 위공무원처리대장	소속,직위,직급,성명,징계요구,징계처분,처분 청,비위유형및내용,근무기간,학력,출신도,전 직,가족수 외
	여론및민원사항처리 부	접수번호, 일자, 유형, 내용, 민원인주소.성 명, 처리일자, 처리내용
기타 첨부자료 (징계처리 관련)	징계심의조서	인적사항(성명,소속,전소속,직급,근무년수,생 년월일,학력) 비위 상세내용 징계요구의견 표창,징계사항
	징계의결서	인적사항(성명,소속,직급), 의결주문, 근거조 항, 징계위원 직급,성명, 징계사유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인적사항(성명,소속,직급) 처분 주문, 이유서

### □ 관련 법령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회의의 비공개)

-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의 회의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 현행 감사문서 공개현황

#### ○ 대다수 공공기관(서울시,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공표

-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 비공개처리 정보
  - 부서명, 관계공무원 인적사항(성명,직급,부서), 계약상대방 등 제3자 법인명, 계약(사업)명 등
  - 비공개 범위는 기관별로 조금씩 상이

### □ 관련 판단사례

#### ○ 서울대공원(동물원) 운영실태 특별감사 관련 결재문서 3건

〈부분공개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감사결과는 공개가 원칙이며, 당해 감사가 종결되어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요청정보 내 포함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2015년 제1차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 ○ ○ 역 침수 서울시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공개요청

〈부분공개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는 언론 등에 기 공개되었고, 시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는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수사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기에, 시 감사결과서의 보고서 내용 중 개인·법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하여 공개(2013년 제4차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 ○ ○ 광역시 ◇◇구청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청소대행에 필요한 명령과 조치 등 대행업무의 지도 및 감독) 및 행정처리 서류 일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미적용〉

- 이 사건 감사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고, 정보에 감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비밀로서 유지되어야만 할 고도의 정책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반면, 원고는 관내에서 분노수집·운반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광역시 ◇◇구를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던바, 이 사건 정보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를 공개할 고도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고가 수행하는 감사 등 업무의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는 인정되지 않음(서울행법 2019구합1524)

○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계획 검토보고' 결재문서

〈부분공개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요청 정보 중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 차량번호 및 사건번호 등은 비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부분공개(2014년 제4차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 무전취식 방송보도 관련 조사담당관이 조사한 관련자 진술내용

〈비공개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 성명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진술내용의 공개만으로도 당사자를 유추할 가능성이 크며, 공개할 경우 조사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진술내용 공개 시 조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되어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2016년 제6차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 서울00공사 공무국외출장 당시 향응수수관련 민원제보사항 조사결과

〈비공개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 특정인에 대한 조사내용으로서 해당 조사가 주로 관련자 진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바, 진술자 성명, 진술내용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익명처리 시에도 진술자를 유추함으로써 사생활 침해가 초래될 수 있음. 또한 진술내용 공개 시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되어 향후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2019년 제1차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 ○ 서울00공사 승진(3급)시험 관련 시험정보 사전 유출 의혹 조사결과 보고서

〈비공개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 공사 승진시험에 대한 세부내용과 진술자 성명, 진술내용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공개시 공사의 공정한 시험관리를 저해하고 사생활 침해가 초래될 수 있음. 또한 진술내용 공개 시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되어 향후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2019년 제1차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 ○ 2012.8월 감사과에 제출된 경위서(진술서, 의견서 등)

〈비공개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 확인서 및 경위서의 경우 이미 관련 감사 및 소송 등이 종결되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개토록 하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제6호)(2013년 제15차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 ○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 중 연번, 공무원명(무기명), 처분일자, 요구기관, 징계처분, 징계사유 세부내용

〈부분공개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청구인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무기명으로 공개하되 징계사유 세부내용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어, 피 청구인은 징계 관련자들에 대한 유추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도 구체적 징계사유를 일부 선별하여 공개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서울고등법원 2006누 30531),
-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다63558)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징계사유 세부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공개 필요

#### ○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 〈공개〉

- 임기를 마친 위원들의 명단과 활동기간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위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원들이 심의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심의에 충실히 임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개(법무부 행심 09-17315)

## □ 검토내용

- 이 기록들은 생산후 30년이 경과한 것으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할 것임
- 모두 종결된 사안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의 적용대상은 아님
- 감사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은 원칙적으로 공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하여야 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감사대상자, 징계 및 문책대상자,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은 그대로 공개될 경우에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
- 감사대상 공무원의 인적사항 관련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의 정보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로서 통상의 경우에는 공개가능한 정보이나,
  - (성명, 직급) 감사기록 내 감사대상자의 성명, 직급 정보는 공개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소속부서) 감사대상자의 소속부서 정보는 공개시 대상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나, 감사대상 비위행위가 직무수행상 일어난 과실과 위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도 인정되므로, 행위시의 소속부서는 공개하되 현재 소속부서는 비공개하며, 사업소(소속기관)의 경우 부서명까지 공개시 당사자 특정 우려가 현저하므로 기관단위까지 공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의 생년월일, 주소, 본적, 가족관계, 근무기간, 상벌사항 등의 정보는 비공개 필요

#### ○ 비위사항 관련

- 감사를 통해 (확인,정리된 비위사항 및 감사결과서에 포함된 내용)은 공개가 늘할 것이나,
- 감사(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확인서, 경위서, 시말서 등에 포함된 세부 진술내용 자체)는 공개시 사생활 침해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검찰·경찰 등에서 통보받은 범죄사항)의 경우 직무수행상 발생한 사안인 경우 범죄사항 개요를 공개함이 타당할 것이나,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비위의 경우 죄명은 공개하되, 사건번호, 세부적인 경위는 비공개함.

#### ○ 감사결과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 경고장

-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다63558)는 점을 고려하여, 인적사항(성명,소속,직급,근무기간 등)을 제외한 내용(징계요구사항, 처분근거, 비위사항 등)은 공개가능 할 것임.

#### ○ 징계처리 관련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징계위원회 회의,위원,발언문서 등을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산 30년 경과 기록의 경우 공개한다고 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규정이 일괄적으로 적용될 사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단, 징계관련 사항은 개인의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대상자의 불명예스러운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정보가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인적사항 및 징계심의조서·의결서·결정통지서 등에 포함된 세부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하여야 할 것임. 단, (징계처분 결과 및 근거조항)은 공개가능할 것임.
-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위원 성명,직위)의 경우, 30년이 경과한 경우 공개한다고 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비위공무원 처리대장 등



-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다63558)는 점을 고려하여, 인적사항(성명,소속,직급,근무기간,연령,학력,출신지역,가족관계 등)을 제외한 내용(징계요구사항, 처분사항, 일자, 처분청, 비위유형, 비위내용 등)은 공개가능 할 것임.

## □ 검토결과

기록물유형	구분	재분류 의견	사유 및 근거
감사기록	30년경과	부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 상세 비공개 대상정보

기록물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공개 가능정보
민원문서 (진정서,탄원서,청원서 등)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중 특별히 사적인 내용	민원내용 중 공개하여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은 정보
공무원범죄사실결과통보 공무원범죄사실통보 공무원사고발생보고 공무원연행보고	인적사항, 사건번호, 상세 범죄사실, 연행일자, 사고경위 등	죄명 범죄사실 개요(직무관련인 경우) 향후 조치사항
진술서,관련자조서,경위서 확인서,시말서 등	인적사항(현소속부서, 직급직위 포함) 세부 문답내용, 진술내용, 비위내용	전체 비공개
감사결과보고서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인적사항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의견 등
경고장,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징계요구의견, 비위사항
감사결과처리부 비위공무원처리대상 여론 및 민원사항처리부	대상자 인적사항, 민원인 인적사항	비위유형 및 내용, 징계요구, 처분결과, 처분청, 처리일자, 처리내용 등
징계심의조서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인적사항, 상벌사항 비위 상세내용	징계요구의견, 처분결과, 근거조항 징계위원 성명,직급

## <안건2>

# 영상기록의 공개 및 서비스 범위

### I

## 기록개요

- ☐ 생산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등 홍보담당 부서, 국제교류담당관
- ☐ 생산시기 : 1993 ~ 2013년
- ☐ 수 량 : 약 600점
- ☐ 주요 기록물 내용

주요 내용	설명	포함정보
홍보영상	개요	1997~2013년 서울시, 행사, 정책 등을 시민,외국인,어린이 등에게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
	주요 기록	서울시정홍보영상물, 서울시어린이홍보영상 서울월드컵홍보CF, 청계천복원홍보영상, 치매노인종합복지서비스홍보영상 2002년 전광판홍보모음 외
(방송 및 홍보영상) 제작 과정 영상	개요	홍보영상 최종 편집본이 아닌 제작 과정 중에 촬영한 영상
	주요 기록	서울월드컵홍보CF 촬영영상 외
시정기록영상	개요	1993~2007년 시정 주요 행사, 시찰, 기공식, 브리핑 등의 행사를 촬영한 영상
	주요 기록	서울시청자료모음(10-2~18) 서울시청자료모음(1~10-1) 외
축제 기록영상	개요	하이서울페스티벌, 하이서울한마당 등 축제를 기록한 영상
	포함정보	축제의 전체 행사를 스케치 및 촬영한 영상으로서 편집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의 영상임
서울시 관련 방송 스크랩	개요	서울시 관련하여 타 방송국에서 방송된 뉴스,인터뷰 등의 영상

## □ 관련 사례

### ○ 서울사진아카이브

- 서울사진아카이브에서 서비스 제공 중인 공보 시정사진의 경우 대부분 30년이상 경과하여 개인(사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인의 얼굴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일괄 비공개하기보다, 개인 명예를 현저히 침해하는 등의 사안이 아닌한 공개 제공하되,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를 중지하고 있음

### ○ 사찰 화재발생 당시 화재동영상파일

〈비공개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직원 및 관계자 개인의 얼굴 등은 공개시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있으며, 목소리를 포함한 음성은 소방작업 수행에 필요한 무전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소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개(2015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 ○ 월드컵공원 내 반려견놀이터쪽 CCTV 영상

〈비공개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CCTV 영상에는 공원 이용자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비공개(2018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 □ 검토내용

### ○ 영상기록의 특징상 초상권, 저작권 등 여러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개여부 및 서비스여부(배포)를 결정해야 함

### ○ 홍보영상

- 기관,정책,관광 등 홍보영상은 애초에 대시민 공포를 위해 제작된 영상이므로 공개 및 배포에 문제가 없을 것임

### ○ (방송 및 홍보영상) 제작 과정 영상

- 방송 및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영상, NG컷, 기초자료 등의 영상으로서, 방송 및 영상물의 최종 결과물이 아닌 제작 과정에 촬영된 개인의

모습과 영상은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됨

#### ○ 시정 기록영상

- 시정 각종 행사 등을 기록한 영상으로서, 시장 등 고위직급자 뿐 아니라 실무 공무원, 행사에 참여한 개인(사인)의 모습,음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산된지 30년이 경과되지 않은 영상으로서, 영상 자체를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초상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침해의 소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하이서울페스티벌 등 축제 기록영상

- 영상 내에 초대가수의 공연등이 포함되어 있어 배포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참여 시민의 얼굴 등이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영상의 전체부분을 공개·서비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필요시 공개가능한 부분을 편집하여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서울시 관련 타 방송국 뉴스 영상, 시장 인터뷰 영상 등

- 해당 영상의 저작권은 서울시가 아닌 해당 방송국에 있으므로 공개 및 배포 불가능할 것임

### □ 검토결과

기록물유형	구분	재분류 의견	사유 및 근거	비공개대상정보
홍보영상	30년 미경과	공개		
(방송 및 홍보영상) 제작 과정 영상	30년 미경과	비공개	제6호	
시정 기록영상	30년 미경과	부분공개		개인의 모습이 상세히 촬영된 부분
축제 기록영상	30년 미경과	부분공개	제3호(저작권) 제6호	공연영상 개인의 모습이 상세히 촬영된 부분
방송 스크랩	30년 미경과	비공개	제3호(저작권)	